

광주서 흥기난동 잇따라... 시민 불안감 상승

상반기 곳곳서 흥악 범죄 증가
피의자, 중학생·자영업자 등
때·장소 안가려 피해 우려 커져
“흥기 소지 처벌 수위 높여야”

올해 들어 광주에서 흥기가 동원된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심 변화가, 경찰서에 이어 중학교까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치안 및 법적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광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오후 3시께 교내에서 흥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A(15)군이 송치됐다.

A군은 광주 북구 한 중학교 교무실과 복도에서 흥기를 들고 교사를 헐뜯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수업 중 자리를 비운 뒤 자신을 찾아와 이유를 묻는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하루 동안 2건의 흥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이날 광산경찰은 보도방 업주(접객원 소개업체) B씨(58)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B씨는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의 한 인도에서 성매매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이들에게 흥기를 휘둘러 C(44)씨를 숨지게 하고 D(46)씨에게 중상을 입



광주 도심 유흥가 흥기 난동 CCTV 캡처화면.

광주지검 제공

혀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같은 날 오전 남구 방림동의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는 E씨가 지인에게 흥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광주 남부경찰에 입건됐다.

치안의 중심인 경찰서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난 5일 북부경찰은 형사 처벌 전력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경찰서를 찾아와 흥기 소동을 벌인 6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이처럼 상반기에만 수십 건의 흥기 사

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 특히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분노형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산구 주민 한경서(34)씨는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했던 일이 일상적 공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장소에서 반복되니 너무 무섭다”며 “호신용 스프레이(분무기)나 전기 충격기를 마련해야 하나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과 장소는 물론 대상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범행들이 반복되다 보

니 언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흥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공공장소에서 흥기 소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흥기를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1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흥기의 은닉 휴대)은 갈·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흥기 소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흥기 난동 사건은 흥기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폭력 사건인 경우가 대다수다. 때문에 흥기 소지 자체를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며 “관련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몰가 상황이나 시대적 변화가 많이 달라졌음에도 현행법은 오랫동안 고착화된 수준이다. 사회적·경제적 지표를 고려해 현시대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발생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본다”라고 제언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현행법상 피해자가 없을 경우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우발적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데다, 재발의 위험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처벌 수위를 강화해 흥기 난동 시 출동한 경찰관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범죄는 개인적 원인에 사회적 원인이 상호작용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에서도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화물차 절도한 60대 구속영장

누범기간에 주차된 화물차를 훔친 60대가 구속 기록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은 10일 특수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광주 서구 매월동 한 도로변에 주차된 1톤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차장을 부순 뒤 차장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종전과 24범인 A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우려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상이 기자

10대 현금 빼앗고 차량에 감금한 5명 ‘입건’

후배를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10대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남부경찰은 후배를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특수강도·공동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대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범죄 행각을 벌인 일당은 지난 5월 말 광주 남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10대 B양을 불러내 현금 10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1시간가량 차량

에 태워 감금했고, 금품을 추가로 빼앗을 목적으로 광주 서구 모처로 끌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평소 돈이 많아 보이는 행세를 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양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CCTV를 통한 추적으로 지난 8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광주 남구의원 “투표용지 불법촬영” 동료의원 4명 고발

고발당한 의원 “사실 아냐” 반박

광주 남구의회 A 의원이 10일 동료 의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 남구 의원은 이날 4명의 남구 의원을 상대로 ‘현대전화로 상임위원장 투표용지를 촬영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광주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A 의원은 고발장에서 “의원 4명이 기표소 내부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며 “이 모습을 목격한 또 다른 의원은 후

대전화 카메라 촬영음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고발당한 한 남구 의원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11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남구의회는 지난 4일 상임위원장을 뽑는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촬영 의혹’으로 파형을 겪으면서 후반기 원구성을 여전히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박찬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